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	**보도참고자료**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12. 4.(일)			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	정상용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인택 (044-203-4389)
	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원 (044-215-2734)
		담당자	사무관	김문수 (044-215-4572)
	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산업교통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허익배 (044-205-6330)
		담당자	수석전문관	정성은 (044-205-6337)
	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		

집단운송거부 관련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

- 불법에는 타협없이 엄정대응 · 국민불편 신속해소 원칙 아래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-

□ **윤석열 대통령**은 **12월 4일**(일) **14시**, **대통령실**에서 **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**를 주재하였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**경제부총리**, **산업부·법무부·행안부·국토부·고용부장관**, **경찰청장**이 **참석**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**피해상황 점검**, **범부처 대책** 및 **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**을 **논의**하였다.

1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산업별 피해상황 점검

○ 11월 29일(화)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**업무개시명령**을 발동한 이후, **시멘트와 레미콘** 뿐 아니라 **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**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*되었다.

* (평시대비 시멘트 출하율) 11.24(목) 5% → 11.29(화) 10.5% → 12.2(금) 65% → 12.3(토) 80%
** (컨테이너 반출입량) 평시 7.3만TEU → 11.29(화) 3.2만TEU(43%) → 12.2(금) 5.1만TEU(69%)

- 다만,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이나 **레미콘 생산량**은 평시의 20% 수준으로 **건설현장의 어려움은 지속**되고 있으며, **주유소 재고부족** 등 **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**되고 있는 상황이다.

- 특히, 전국 1,269개 건설현장 중 751개 현장(약 60%)에서 **레미콘 타설이 중단**되고, **LH 공공주택 건설 공구** 244개 중 128개 공구(52%)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등 **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위협**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.

2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진행 현황

○ 12월 3일 10시 기준, 운송거부가 확인된 **운송업체 33곳**에는 **명령 송달을 완료**하였으며, 운송거부 **화물차주 791명**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**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** 방식으로,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**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** 방식으로 **명령 송달을 실시**하였다.

○ **명령 송달 결과**,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*은 **운송을 이미 재개**(운송업체 22곳)하였거나 **재개 의사가 있다**고 밝히는 등 **복귀 의사를 표명**하였으며, 정부가 복귀현황을 지속 확인할 예정임에 따라 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문자메시지 송달된 264명 중 185명 통화 → 175명 복귀의사 표명, 10명 운전 등 통화 중단

○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**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**하고, 12월 5일(월)부터 국토부·지자체·경찰청 **합동조사반을** 운영하여 **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**를 실시하기로 하였다.

3 집단운송거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부처 대책

○ **집단운송거부 10일간** 시멘트 · 철강 · 자동차 · 석유화학 · 정유 등 **주요 업종**에 총 **3조 263억원 규모**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.

* (산업별 출하차질(억원)) 시멘트 1,137, 철강 10,306, 자동차 3,462, 석유화학 10,173, 정유 5,185

○ 정부는 **산업별 피해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**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**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**하기로 하였다.

○ **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**으로,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**자가용 화물차**의 **유상운송행위**에 대한 **일시적 허가**를 **확대 적용***하고,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**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****하는 한편, **긴급 운송수요 대응**을 위해 군·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**추가 투입**하기로 하였다.

* 11월 24일부터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차(카고)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(트랙터), 11월 30일부터 탱크로리 유조차에 기 적용 중으로, '곡물·사료운반차'도 추가 적용

** 현재 견인형 화물차(10톤 이상)에 한해 통행료 면제 중 →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확대

○ 또한, **조속한 물류 정상화**를 위한 **추가 조치사항**으로 **운송거부 행위**와 함께 빈번히 발생하는 협박·폭력 등을 통한 **운송방해 행위 등**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·행정적 **엄정 대응조치 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○ 현행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**운송방해 행위**에 대한 **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**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,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**유가보조금**과 **고속도로 통행료**를 **운송거부 차주**에 대해서는 **지급하지 않기로** 하였다.

○ 아울러,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**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**하고 화주의 **자체 운송능력을 확보**하여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**대응력을 강화**하며, **철도물류 분담률 확대**를 추진하는 등 화물 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하였다.

4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

○ 불법행위에 대한 **타협없는 무관용 원칙** 아래, **주요 항만과 물류센터·산업단지**에 경력·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·교통·형사·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**24시간 경찰·지자체 합동 대응체계**를 구축하여 **불법행위를 차단**하고,

○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·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**신속하고 철저한 수사***를 통해 **전원 사법처리**하는 한편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**게릴라식 운송방해** 및 **저속주행·무단점거** 등에 대비한 **기동단속팀을 운영**하기로 하였다.

* 미참여 화물차량에 쇠구슬 발사,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 등 총 24건 41명 수사중(12.3 16시 기준)

○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**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**에 대해 **공정거래위원회**와 공동으로 대처하여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,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**위반여부를 계속 조사**하는 한편, 「지자체→운송사→운수종사자」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**불법행위에 대한 신고**를 **활성화**할 계획이다.

○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·화주 등에 대한 폭행·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**보복 범죄**에 대해서는 **전담 수사팀을 신설**하여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,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**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**하는 한편, **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**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**보복범죄** 대응과 **피해자 신변보호·피해회복 지원**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.

□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**세부 추진방안을 마련**할 예정으로,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**산업·경제계 피해 최소화**를 위해 **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**할 계획이다.

○ 그리고 정부는 **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**한다는 **원칙을 확고히 견지**할 것이며, 화물연대 측에 **민생경제를 볼모**로 한 **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**를 **즉시 중단하고** 하루빨리 **운송업무**에 **복귀**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